

남 북 협 력 동 향

(2009. 3. 16 ~ 2009. 6. 22)

■ 북한, 미국 식량지원 거부(3. 18, 연합뉴스)

-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“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”면서 “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,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”고 밝힘
- ※ 이번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미국과 북한이 2008년 5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,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세계식량계획(WFP)을 통해 40만t, 5개 비정부 단체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임
- 우드 대변인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천t의 식량을 전달했고,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적 분인 5천t 가량의 야채기름과 옥수수, 콩은 지난 1월 북한에 도착해 미국 비정부기구(NGO)들에 의해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
- 미국은 지난달 북한 내 식량 배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모니터 요원의 배치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하였으나, 북측에서 거부감을 표시하여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

■ 북한, 21일부터 군통신선 정상화(3. 20, 연합뉴스)

- 북한은 21일 오전 8시부터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(3.9~20)동안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함
-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팩스를 보내 “우리(북)측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하였던 북남 군통신을 21일 8시부터

다시 회복시킬 것”이라고 밝힘

- 이에 앞서 북측은 키 리졸브 훈련 종료일인 20일 개성공단관계자의 출입에 대한 동의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3. 9일 이후 세 번째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하였음
-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3. 9일 1차 전면 통행 차단 후 다음 날 정상화했지만,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허용한 데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는 통행을 전면 허용한 바 있음

■ 북한, 미국인 여기자 2명 억류(3. 21, 조선중앙통신)

- 북한은 17일 조·중(북한·중국)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함
- 미국 ‘커런트 TV’ 소속 여기자 2명은 지난 17일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으며, 미 국무부는 20일 정레브리핑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

■ 『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』 개정안 입법예고(3. 27, 통일부)

- 정부는 27일 『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』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, 향후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. 31일 동시 시행할 예정임

※ 개정안 주요 내용

-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: 북한방문 승인시 부여하는 방문기간(1년 이내),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 대상 등
- 행정절차 간소화 : 방문기간 내 별도 승인 없이 왕래 허용(협력사업을 하는 자·수송장비 승인을 받은 자 등), 협력사업 신고제 도입(특구지역내 50만달러 이하 투자 사업), 북한방문·북한주민접촉 민원 처리기간 단축(10일 → 7일)
- 교류협력 관리체계 보완 : 북한방문·반출입·협력사업 등 승인시의 ‘조건’ 부가사항 명시, 당국 간 합의사업 등의 위탁 가능 기관 명시

■ 북한, 장거리 로켓 발사(4. 5, 통일부 · 연합뉴스)

- 우리 정부는 북한이 4.5(일) 11: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함
 - 미 국방부는 동 로켓의 2, 3단계 추진체가 무수단리 발사 지점으로부터 3,100km 떨어진 태평양상에 추락하여 발사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함
 - 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인공지구위성인 ‘광명성 2호’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함
- 우리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*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을 밝힘
 - * 유엔안보리는 ‘06년 10월,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에 핵·미사일 개발 금지를 요구하고,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
-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비난함
 - 오바마 대통령은 “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” 이라고 지적함
 -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, 기존 대북제재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
- 중국과 러시아는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이며,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

■ 북한, 최고 인민회의 개최(4. 10, 연합뉴스)

- 북한은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를 개최하여,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하는 한편,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을 구성함

-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, 보충함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”고 보도했으나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
-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작년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, 올해 예산을 채택함
- 북한은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작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.2% 증액됐다고 밝혀 북한 돈 4천826억원(미화 34.5억 달러, 1달러=140원 적용) 가량으로 추산됨
- 한편, 북한은 이번 회의에 앞서 8일 평양시민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로켓발사 축하 군중대회를 개최하였음

■ 북한, 민경협 폐지 추정(4. 10, 동아일보, YTN)

- 북한은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내각 장관급 명단을 발표하면서,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(민경협) 위원장을 발표하지 않았음
- 최고인민회의에서 민경협을 내각에서 제외시키면서,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은 노동당 민족경제연합회(민경련)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되어 해외경제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짐
- 반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여 부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로,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한편,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을 국방위원에 임명함
- ※ 북한은 남북경협 사업이 늘어나던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내각 산하의 민경협으로 기구를 확장한 바 있으며, 이번 조치로 다시 축소 복귀하게 되었음

■ 안보리,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(4. 14, 연합뉴스)

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(현지시간) 전체회의에서 “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”면서 “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”이라고 발표

-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임

※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(WMD)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,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, 화물 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 명단은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.

■ 북한,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선언(4. 14, 연합뉴스)

- 북한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“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어떠한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힘
- 성명은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 할 것 이라고 밝히고,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
- 또한 자신들의 “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”이라고 밝히고 “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함
- 한편 국제원자력기구(IAEA)는 14일 북한이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핵불능화 검증요원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고,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발표
- 미국 백악관은 15일 미국과 북핵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힘

■ 남북 당국자 개성공단 접촉 결과(4. 21, 연합뉴스 / 통일부)

- 정부는 21일 저녁 8시 35분부터 22분 동안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

에서 북한과 접촉하고, 의견을 교환함

-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 및 기존계약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, 이를 위한 협상에 남측이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함
- 북한은 ▲개성공업지구의 ‘토지임대차계약’을 재검토하고, ▲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며, ▲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을 주장
- 우리 정부는 ①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므로 PSI 활동이 대결포고·선전포고라는 북한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비판하고, ② 개성 억류자 인도, ③ 12.1자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 철회, ④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의 중지 등을 촉구함
-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, 개성공단 관련 협력을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에도 호응하지 않았음

■ 북한 외무성,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(4. 25, 연합뉴스)

-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4월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힘
- 대변인은 “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”이라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함
- ※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‘의장성명’ 채택으로 6자 회담이 무력화됐으며, 핵시설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할 것이며, 그 일환으로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

■ 안보리,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(4. 25, 연합뉴스)

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(현지시간) 유엔본부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함

- 제재위원회 의장인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「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, 단천상업은행, 조선령봉종합회사」 등 3곳을 선정기로 합의했음을 밝힘
- 일킨 대사는 또한 “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 기술, 품목 등의 목록을 업데이트했으며, 여기에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”고 밝힘
- 이로써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함

■ 북한,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위협(4. 29, 연합뉴스)

- 북한 외무성은 29일 성명을 통해 “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,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(ICBM) 발사 시험 및 경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고 밝힘
-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북한 3개 회사*에 대한 제재 등을 “반공화국 제재를 실행에 옮기는 불법 무도한 도발행위”이며, “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”하는 것이라고 비난
- *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, 단천상업은행, 조선령봉종합회사
- 성명은 “1990년대에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”고 상기시키며,
- “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라”고 요구함
- 또한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▲첫째, 공화국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등의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, ▲둘째, 경수로 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 자체 생산 기술 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함

-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0일 “북한의 최근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하고 있다”며, “우리 행정부는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함

■ 「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」 개정 고시 (5. 1, 정부 관보)

※ 주요 내용

- 남북협력기금 반입, 반출 자금 대출 범위 확대
 - － 남북협력기금 반입, 반출 자금 대출 대상을 물품 이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
-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산정방식 조정
 - －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하한선(1%) 도입

■ 북한, 개성 역류 직원 조사 심화(5. 1, 연합뉴스)

-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(이하 “총국”)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모씨에 대한 북한 역류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“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”고 말함
- － 총국 대변인은 또한 “유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”며 “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”고 밝힘
- 이와 관련하여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“정부는 우리 근로자 역류 문제가 개성공단만의 본질적인 문제이며 개성공단의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성공단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”며, “북한은 역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”고 촉구함

■ 중국과 북한 관광 철도 신설(5. 5, Irish Times)

- 중국과 북한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4일 보도함
- 이 노선은 중국 지린성 투멘시와 북한의 함경북도를 운행할 예정이며, 이번 달 말경 시범운행을 위한 개통식을 개최할 계획임

■ 북한, 미국의 대화 제의 거부(5. 8, 연합뉴스)

-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선 스티븐 보즈워스 미 행정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7일 첫 방문국인 중국에서 “미국은 북한과 다자 및 양자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”며 북한과의 대화, 협상 의지를 역설함
- 이에 반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“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아서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”며 대미협상 무용론을 선언하고 “이미 밝힌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힘
- 대변인은 또한 “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지 부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”고 비판함
- 보즈워스 대표는 8일 북한의 성명과 관련하여 “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”이라고 경고하는 한편, “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”며, “다자회담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”는 입장을 재확인함

■ 대북지원단체 “월드비전” 평양 방북(5. 8, 연합뉴스)

- 정부가 민간단체 방북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이 정부 승인을 받아 9~12일 평양을 방문함
- 월드비전은 평양과 평안북도 정주, 황해남도 배천 등지에서 씨감자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로 함

-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 방문을 통제하면서, 인도적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고 있음
-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가 평양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소아간질환자 치료 프로젝트를 위해 ‘장미회’ 관계자들이 방북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임

■ 북한, 개성공단 현행 법규 무효화 선언(5. 15, 조선중앙통신)

- 북한은 15일 오후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법규 및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, 북한이 개정하는 법규를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힘
-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6.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, 노임,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며, 변화된 정세에 맞게 법규를 개정할 것임을 밝힘
-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계약 개정을 위해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하였지만, 남측에서 “의제 밖의 문제”로 실무접촉을 무산시켰으며,
- 남측이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“실무접촉을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행위”라고 주장함
-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“북한이 기존 법규 및 계약의 일방적 무효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”고 밝히며, 북한이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15일 오전에 제의한 대로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함

■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 결과(5. 22, 통일부)

-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「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·관리 경비 지원안」 등 3건을 의결함

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·관리 경비지원

-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 6억 7,400만원을 대한적십자

사에 무상 지원

② 남북간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지원

- 남북간 반출입 물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고,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3억 6,300만원 무상지원

③ 경협·교역보험제도 개선

- 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 및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△경협보험 기업별 가입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, △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「원부자재 반출보험」 및 「납품이행보장보험」 도입
- 동 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하고, 시행 시기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임

■ 조선신보, 미국에 ‘대담한 접근법’ 촉구(5. 23, 연합뉴스)

-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‘조선신보’는 23일 오바마 행정부가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“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”며, “뚜렷한 정책전환 의지”를 보일 것을 촉구함.
- 신문은 “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의 조(북)·미 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되고”있다고 지적하며, “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조선(북한) 측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”고 강조함

■ 북한, 25일 오전 2차 핵실험 실시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(5.25, 북한 조선중앙통신, 연합뉴스)

1. 북한 발표 내용

- 북한은 “5월 25일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”며 “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”고 주장

- 한편, 우리 군은 북한이 5.2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징후를 포착하고, 이를 정밀 분석중임

2. 우리 정부 및 주변국 입장

-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발표에 앞서 25일 브리핑을 통해, “오늘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.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”고 밝힌 바 있음
- 미 국무부 대변인은 “북측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”며, “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”고 밝힘

※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북핵 6자회담 교착상태이던 2006년 10월 실시되었음. 당시 핵실험은 진도 3.5로 감지되었으며,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718호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.

3. 배경 분석

-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조기 확정 및 북,미 양자대화 촉구
- 핵보유국 자격으로 협상력 강화
 - 2차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함
 - 향후 협상 진행 과정에서 6자회담 합의에 거론된 경제 지원과 북미관계 정상화 외에 주한미군 철수,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폐지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

<핵실험 관련 주요 경과 일지>

- ▲ 북한, 장거리 로켓 발사(4.5)
- ▲ 안보리,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(4.14)
- ▲ 북한,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선언(4.14)
- ▲ 안보리,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(4.24)
- ▲ 북한,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위협(4.29)

■ 북한, PSI 전면 참여에 “군사적 타격” 대응(5. 27, 연합뉴스)

-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남한 정부의 PSI* 전면 참여에 “군사적 타격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

* PSI :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(WM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)

- 대변인은 한국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“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”이라며, “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,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대응할 것”이라고 밝힘
- 또한 “PSI 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『정전협정』에 대한 명백한 부정”이므로, “북측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”이라고 선언하며,
- “조선 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(백령도, 대청도, 소청도, 연평도, 우도)의 범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과 남측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”이라고 강조함
- 우리 정부는 26일 “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”고 밝힌 바 있음
- 또한 “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*는 그대로 적용될 것”이라고 강조함
- 정부는 PSI에 가입함으로써 영해내에서 대량살상무기(WMD, Weapons of Mass Destruction)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,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착륙 유도 및 검색이 가능해짐

※ 남북해운합의서

- 2004년 5월 28일 채택된 것으로, 15개 조문과 부속합의서 7개 조문으로 구성
- 상대측 영해에서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행위, 군사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함
- 또 부속합의서에는 ‘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,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,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(2조8항)’고 명시되어 있음

■ 북한, 신형 미사일 발사 및 ICBM 발사 징후 포착(5. 30, 연합뉴스)

- 군당국은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2차 핵 실험 이후 단거리 미사일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
- 29일 발사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정찰기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
-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됨
- 정보 당국자는 “최근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북한 화물 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됐다”고 밝힘

■ 국정원, 김정은 후계자 선정 정황 포착(6. 2, 연합뉴스 / 조선일보)

- 국정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“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 전문을 해외 주재 공관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보고했다고 알려짐
- 정보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, 1일 정부로부터 북한의 후계 구도 움직임이 있고, 김정은을 내세워 충성맹세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”고 말함
- 한편 국정원의 판단 근거인 ‘외교 전문’의 내용과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
- 정부 핵심당국자들은 “외교 전문 자체를 입수한 게 아니라 ‘휴민트(HUMINT; 인적 정보)’를 통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의 정확한 문구는 모른다”고 말하고 있으며, 국정원도 “외교 전문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”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
-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7일 김정은 후계자 보도와 관련하여 “현재 그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,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모른다”고 말함
- 클린턴 장관은 이어 “그(김정은)가 선택 됐다면 그 시기와 누가 그를 후견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평가해야만 할 것”이라고 밝힘

■ 북한, 미국 여기자들에 각 12년 중형(6. 8, 조선중앙통신)

- 북한 중앙재판소는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
- 중앙통신은 “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(유나 리)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였다”며 “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,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”고 밝힘
- 미국의 ‘커런트 TV’ 소속 두 여기자는 3월 17일 북, 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억류됨
-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두 여기자를 조기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

■ 안보리 「대북결의 1874」 만장일치 채택(6. 12, 연합뉴스, 안보리 결의안)

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「대북 결의안 1874」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
- 대북결의 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‘가장 강력히 규탄한다(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)’고 명시하고,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 금지,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요구함
- 1874호의 제재 내용은 ▲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▲화물 검색 ▲금융·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며, 2006년에 채택된 1718호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임
- △ 화물·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: 금지 대상을 대량살상무기(WMD)와 중화기 등에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함
- △ 화물 검색 : 금수대상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기국*의 동의를 있으면 공해에서의 검색도 촉구함, 금지품목 적발 시 압류·처분해야 함,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를 금지함

* 기국: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신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

△ 금융 및 경제 제재 : 기존의 핵·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동결에서 나아가 무상원조, 금융 지원,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의 감축을 촉구함 (단, 인도주의·개발·비핵화 촉진 목적 예외)

- 단체, 물품,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1874호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은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조정기로 하여, 제재대상 기업이 일부 추가 될 가능성이 있음

■ 북한,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및 새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(6. 13, 북한 외무성 성명)

- 북한 외무성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반발, ▲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▲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▲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함
- 성명은 “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”며,
- “첫째,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.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되었다.”
- “둘째,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.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.”
- “셋째,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”고 밝힘

■ ‘스킨넷’ 개성공단 철수(6. 19, 아시아경제)

-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‘스킨넷’이 17일 개성공단 업체 중 처음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함
- 스킨넷은 15일 오후 개성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장비를 휴전선 넘어 파주 공장으로 옮기기 시작하여, 17일 북측에 근로자 월급 및 퇴직금을 전달하고 파견 직원 모두를 철수시킴

■ 북한, “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”(6. 19, 연합뉴스)

- 북한은 19일 개성공단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힘
-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억류 근로자 석방,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함
- 우리 측은 제 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, 『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3대 원칙』*을 제시함

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

- △ 규범 확립 원칙 : 남북간 합의와 계약,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
- △ 경제원리 추구 원칙 : 정치·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
- △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: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